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

업무협약식 및 공동 세미나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4시

장 소

호텔 리젠트 마린 더 블루

주최·주관

JRI 제주학연구센터 J 제주언론학회
(사)제주언론학회



목 차

행사개요 5

인사말 9

발표자료 15

 발표자료(1) 제주학 확장 매체로서 ‘마을 신문’의 가능성 17

 - 김형훈 ((사)제주언론학회장/미디어제주 편집국장)

 발표자료(2) ‘소멸 위기’ 앞에서 제주학과 언론학은 어떻게 네트워크 할 것인가 ... 35

 - 이정원 (제주언론학회 총무이사/제주한라대 교수)

메모 52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
업무협약식 및 공동 세미나

행사 개요

업무협약 및 공동 세미나

-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년 설립 이후 약 36개의 제주학 유관 단체들과의 업무협약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음
- 제주학연구센터 성과 및 사업 홍보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업무협약 및 공동 세미나를 열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제주언론학회 간 업무협약 및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학의 시선에서 바라본 제주학의 현재를 진단해 봄으로써 제주학과 언론학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주제: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
- 일시: 2024년 11월 29일(금) 14시-17시
- 장소: 호텔 리젠티마린 더 블루
- 주최·주관: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제주언론학회
- 내용: 업무협약 체결식, 공동 세미나
- 참석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제주언론학회 관계자 30명 내외

□ 프로그램

시간	항목	내 용
14:00 ~ 14:20	등록	사전 등록
14:20 ~ 14:50	업무협약식	(사회: 제주학연구센터 오유정 전문연구위원) -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인사말씀 - 김형훈 제주언론학회 이사장 인사말씀 협약서 내용 설명, 서약/ 단체사진촬영
14:50 ~ 15:00	휴식	자리 정돈 및 세미나 준비
15:00 ~ 15:40	발표 (각 20분)	(사회: 제주학연구센터 조정현 전문연구위원) [발제1] 제주학 확장 매체로서 '마을 신문'의 가능성 - 김형훈 제주언론학회 이사장(미디어제주 편집국장) [발제2] '소멸 위기' 앞에서 제주학과 언론학은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 - 이정원 제주언론학회 총무이사(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15:40 ~ 15:50	휴식	
15:50 ~ 16:50	토론	좌장: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총 3명 - 이진영(제주기록문화연구원 부원장) - 정용복(제주언론학회 부회장/언론학 박사) - 김용현(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
업무협약식 및 공동 세미나

인사말

인사말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사)제주언론학회가 협력하여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를 주제로 업무협약식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학 정립과 발전을 위해 김형훈 제주언론학회장님과 학회 관계자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 사회의 바른 여론 형성과 저널리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언론인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세미나에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연구자와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AI 기술의 획기적 진화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를 안정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언론학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와 (사)제주언론학회는 오늘 언론학의 시선에서 제주학의 현재를 진단하고, 제주학과 언론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두 기관이 제주학에 대한 공동 연구와 교육□홍보 등을 충실히 펼치면서, 제주학의 지평 확대와 언론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미디어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도민들과 더욱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따뜻한 제주학’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어느덧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다가올 새해는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사말

김형훈

((사) 제주언론학회장)

제주학과 언론이 한자리에 마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과 센터 내 구성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 도내 언론은 제주학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든 숨은 공로자입니다. 언론은 ‘제주학’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부터 제주학을 지켜내고 알려온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걸 증명하는 자리여서 더욱 기쁩니다.

제주 도내 언론이 제주학을 지켜낸 숨은 공로자임은 분명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예전과 달리 바뀌고 있는 언론 환경은 제주학을 제대로 구현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도내 언론은 속보 경쟁, 클릭 경쟁 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제주를 찬찬히 들여다볼 기회가 예전보다 줄고 있습니다. 제주언론학회는 이 점을 명심하고, 제주 도내 언론이 제주 본연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와 오늘 진행하는 업무협약식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제주언론학회는 협약을 계기로, 제주 도내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센터와 함께 연구를 하며 언론인의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는 비단 제주 도내 언론인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인의 역량 강화는 곧, 제주 도민의 역량강화와 연결됩니다.

업무협약과 더불어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는 ‘처음’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처음이기에 다소 미약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세미나의 질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세미나는 제주언론학회 소속의 연구자들도 제주학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제주학을 전파하는 언론인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이런 자리에서 자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제주학연구센터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제주학 연구의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활동이 더 잘 알려지고, 제주언론학회 차원에서도 제주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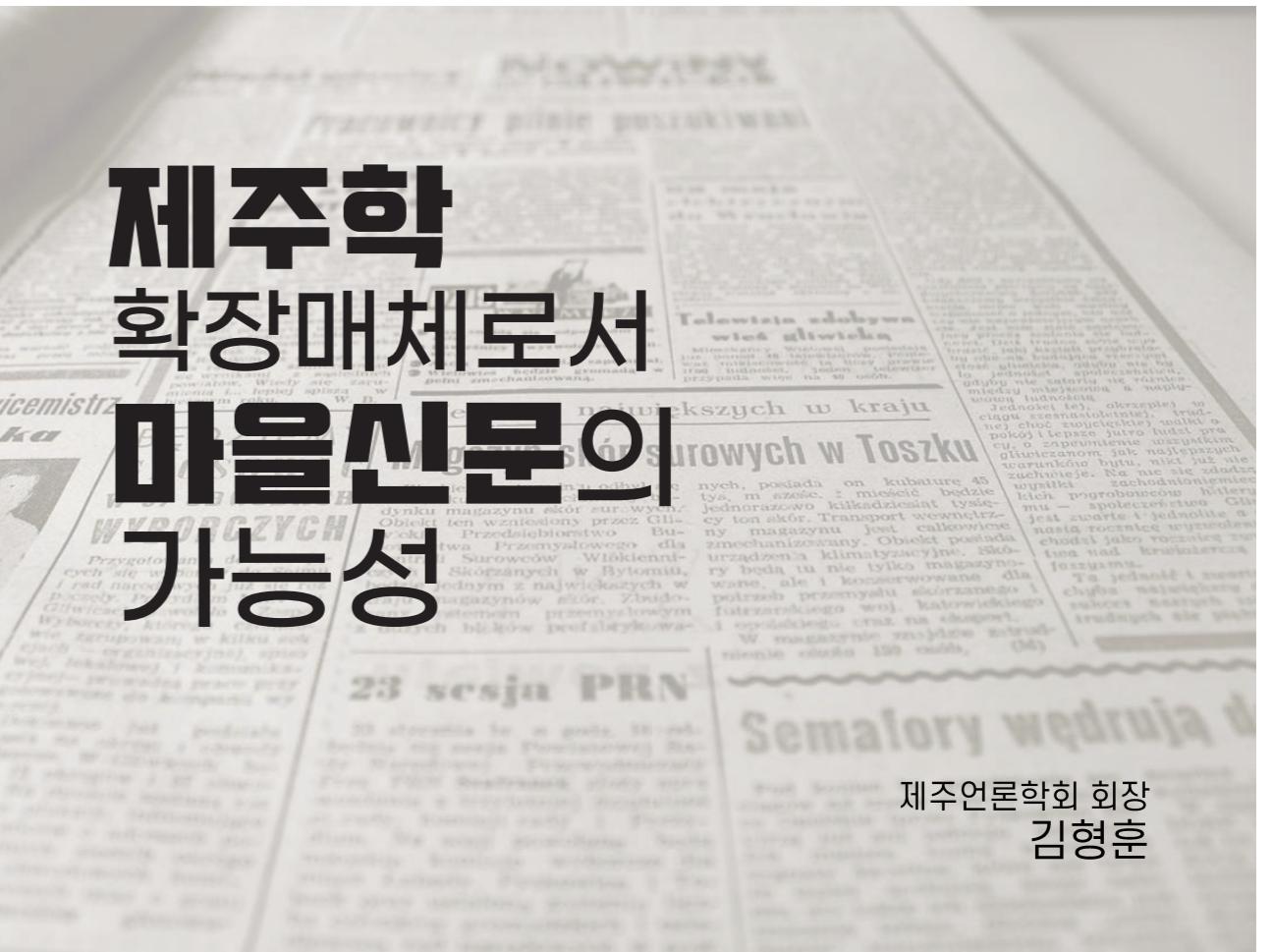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주학’이라는 배에 함께 오르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주학의 미래는 밝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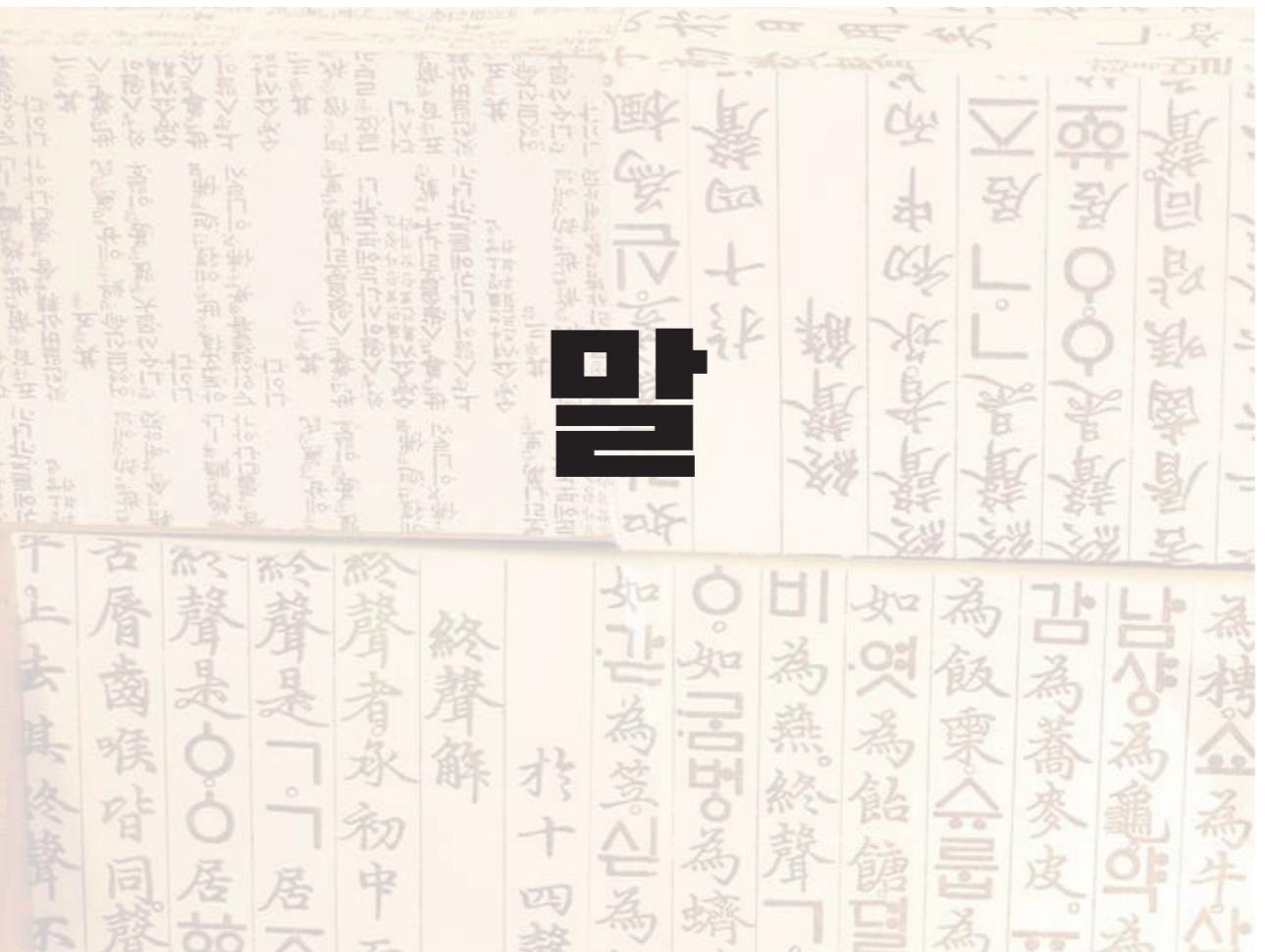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
업무협약식 및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제주학 확장매체로서 마을신문의 가능성



제주언론학회 회장
김형훈



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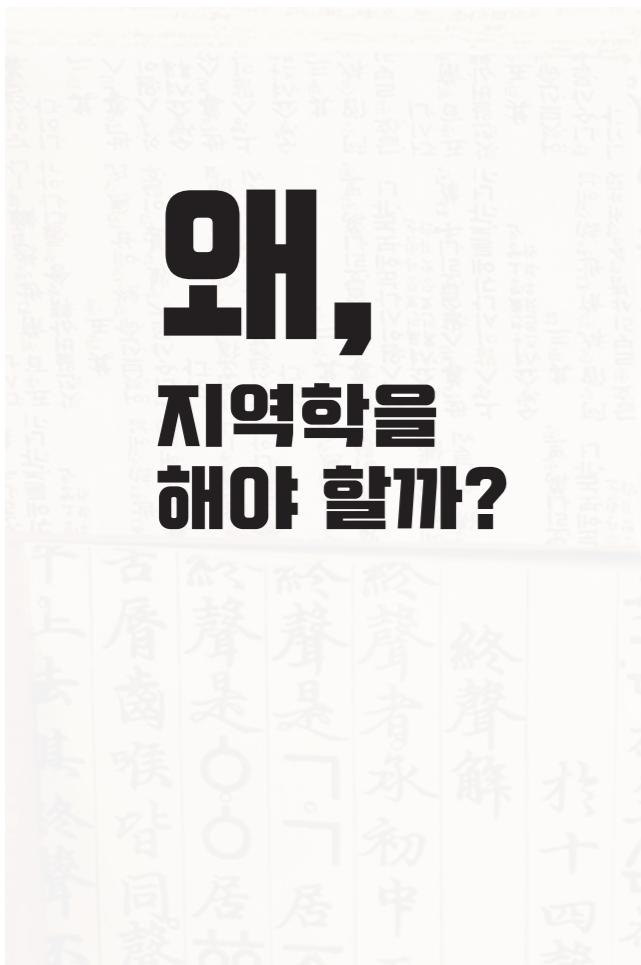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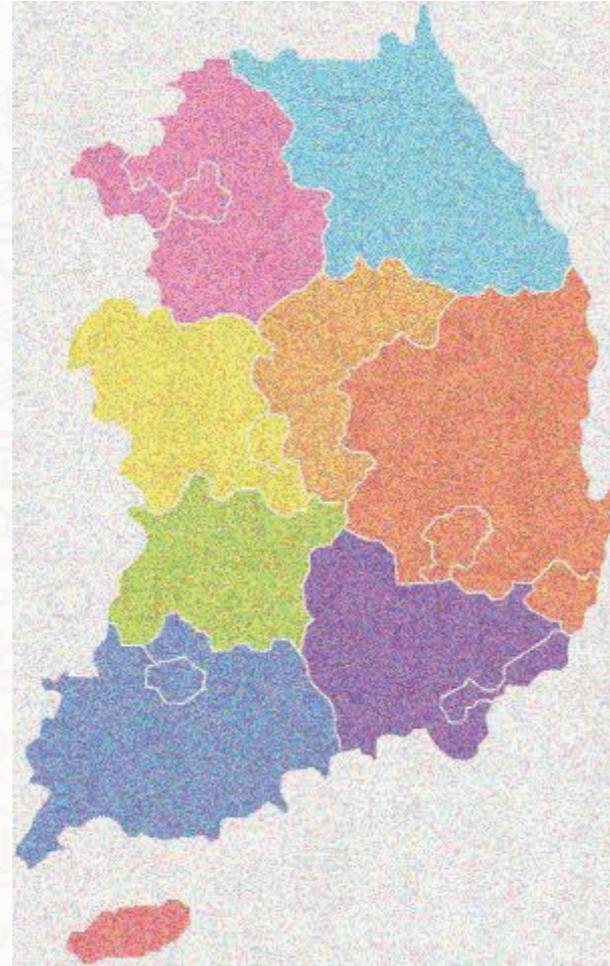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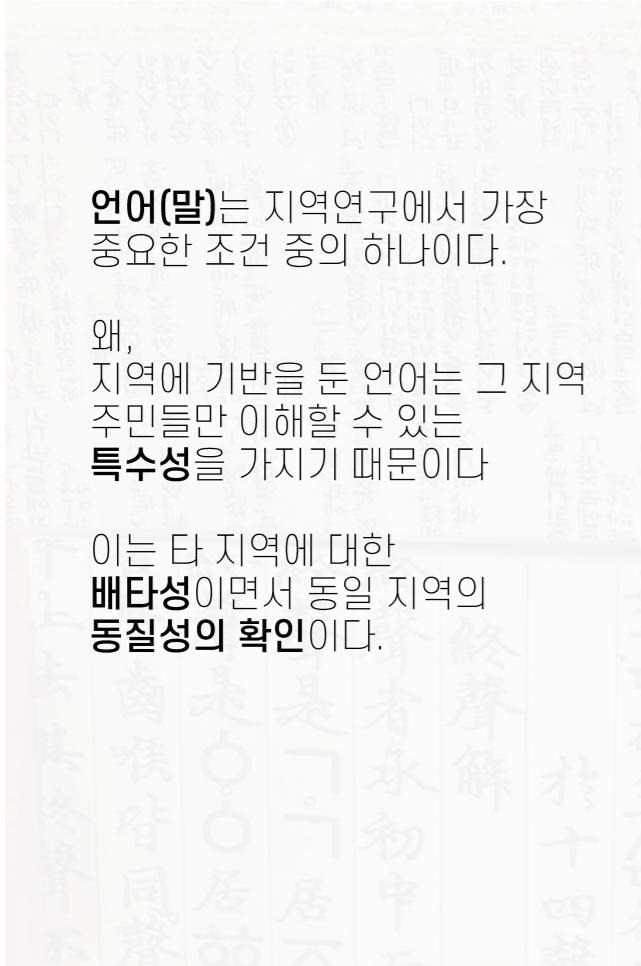
終聲解

於十四聲

○。如「마」為躋。
如「간」為筭。
終聲者，永初中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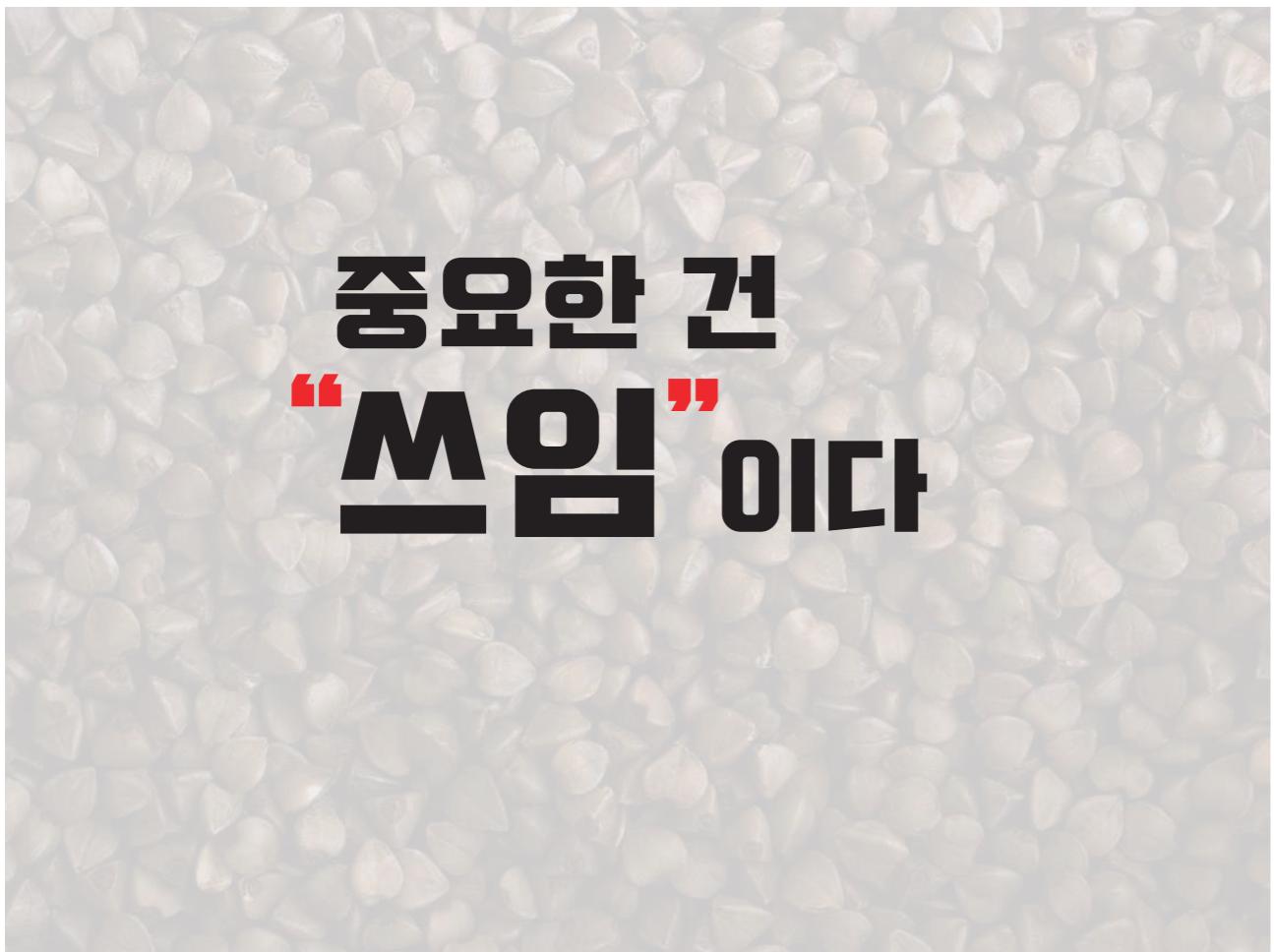
終聲是「居」。「居」
古唇齒喉舌同聲。

上去了其終聲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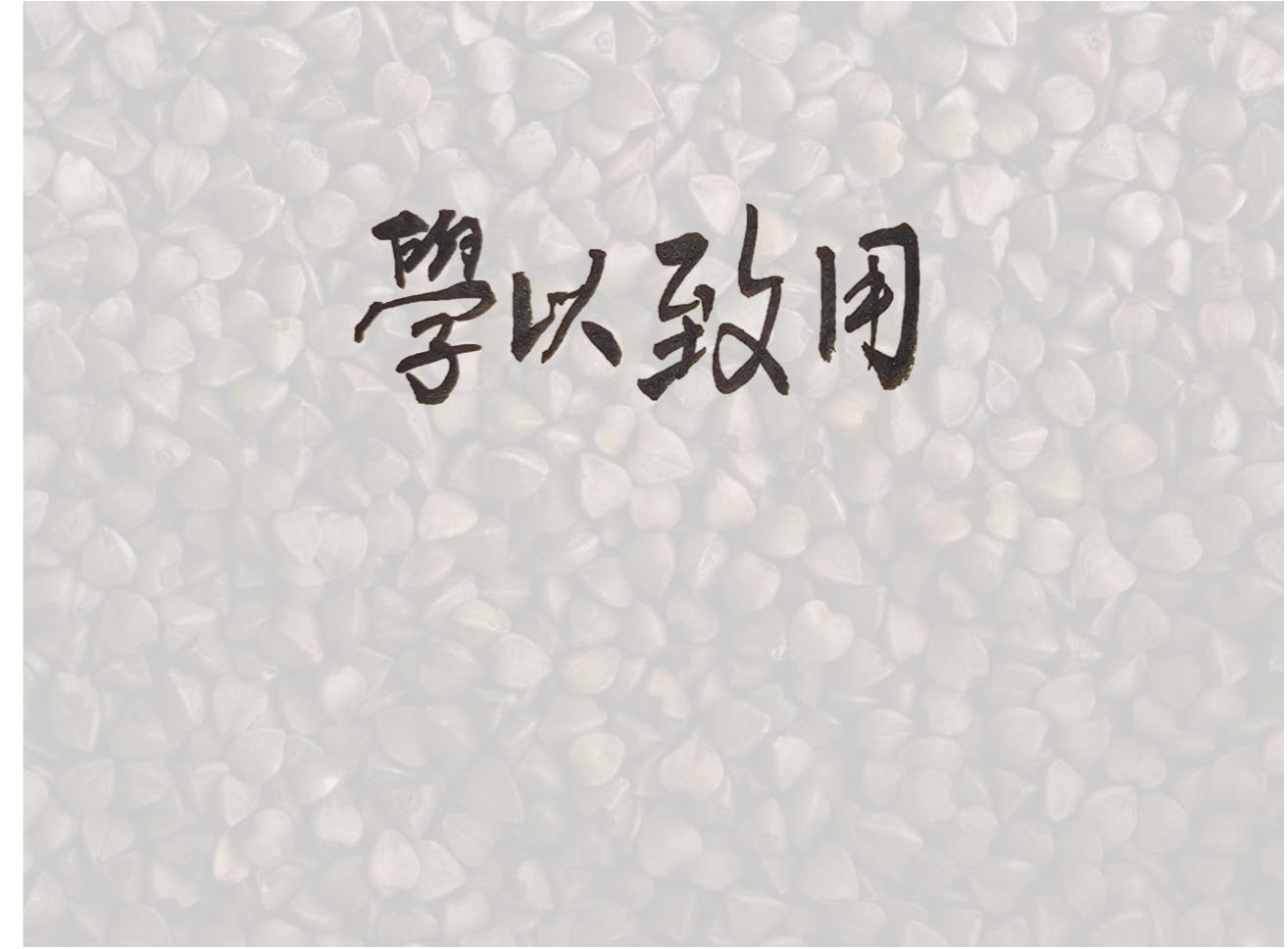




지역의 미래 발전상 모색



중요한 건
“쓰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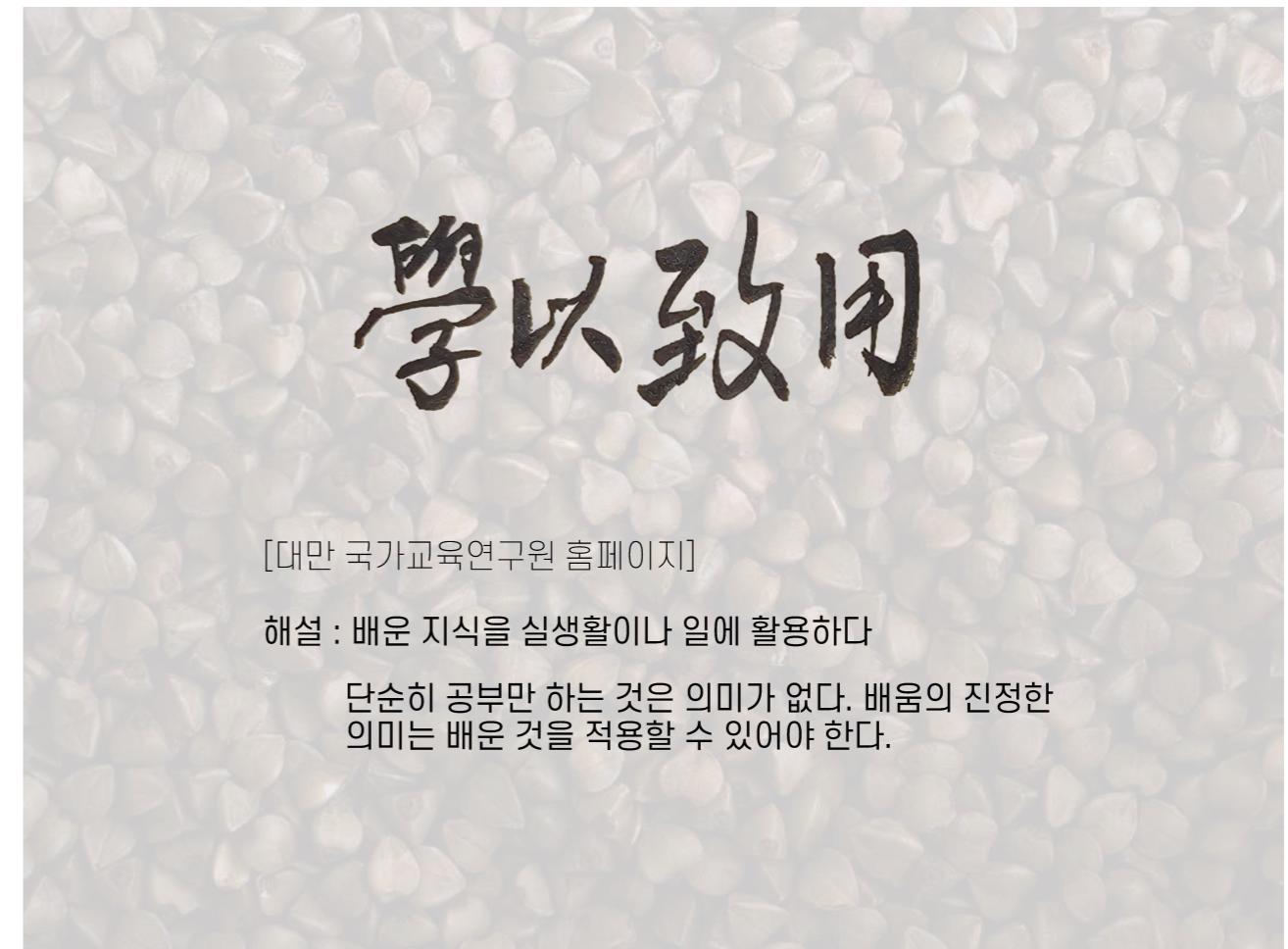


學以致用

[대만 국가교육연구원 홈페이지]

해설 : 배운 지식을 실생활이나 일에 활용하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움의 진정한
의미는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지역학을,
제주학을 널리
알려줄까?

바로 '미디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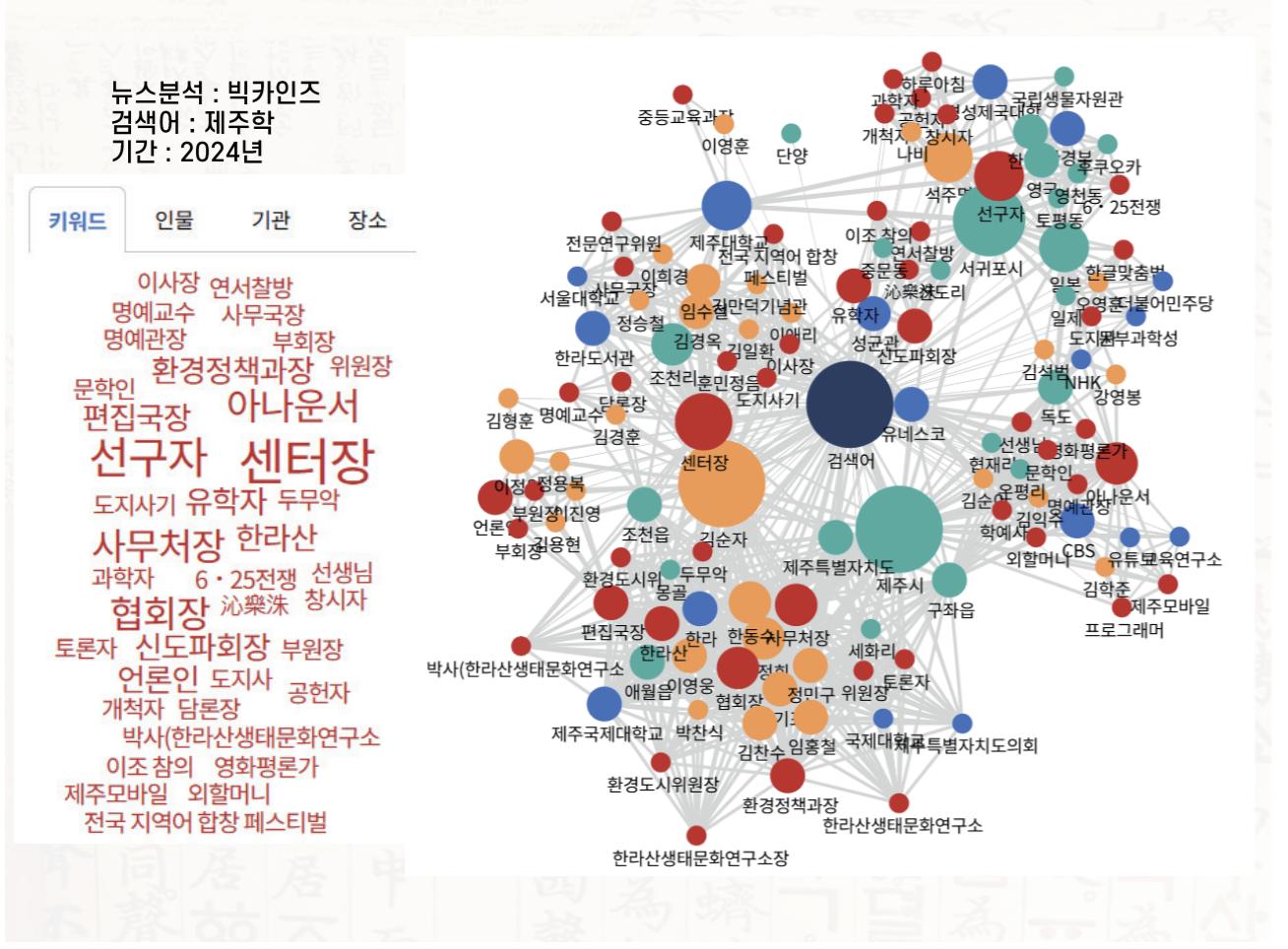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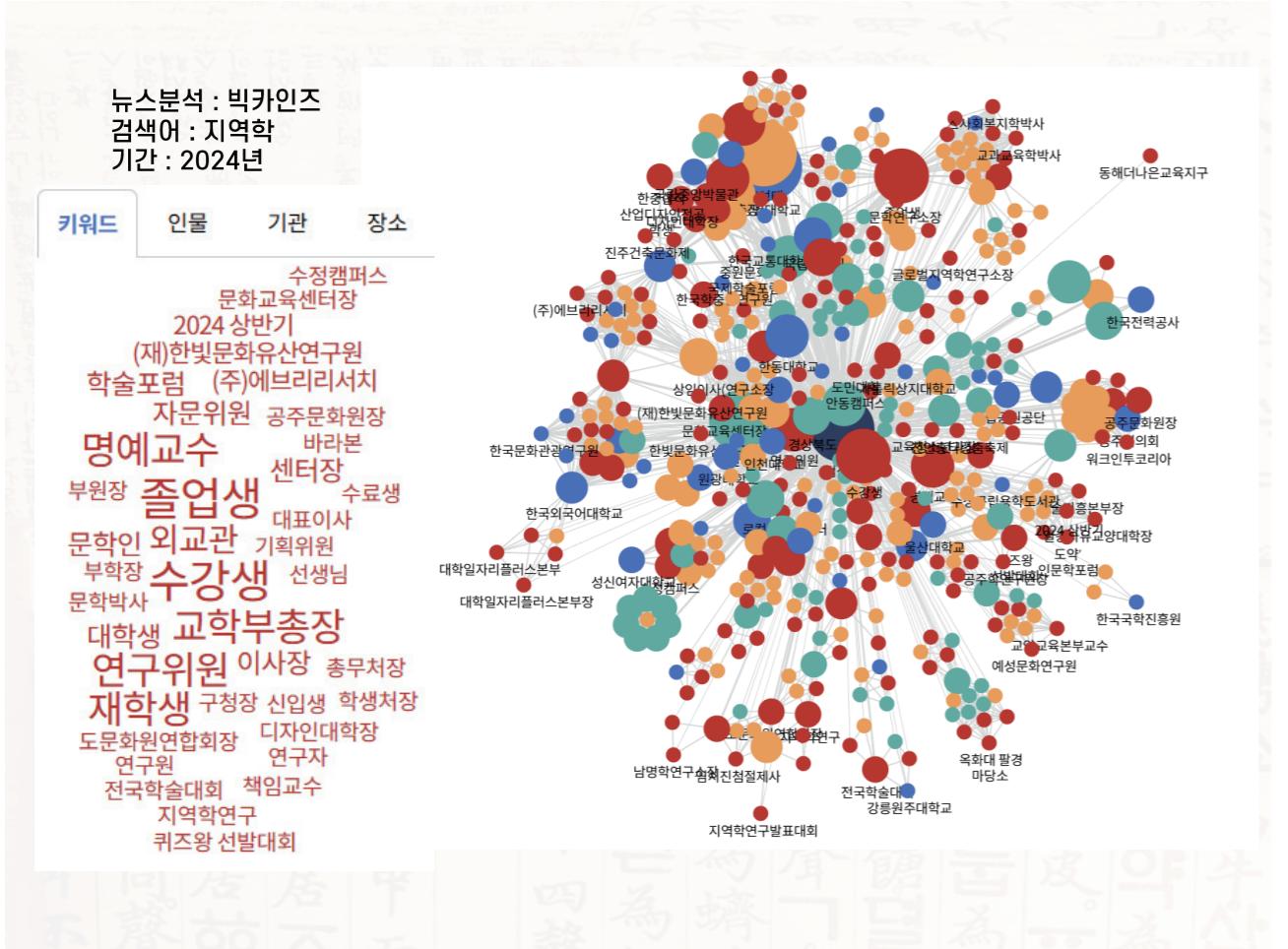


레오 러너 (1907-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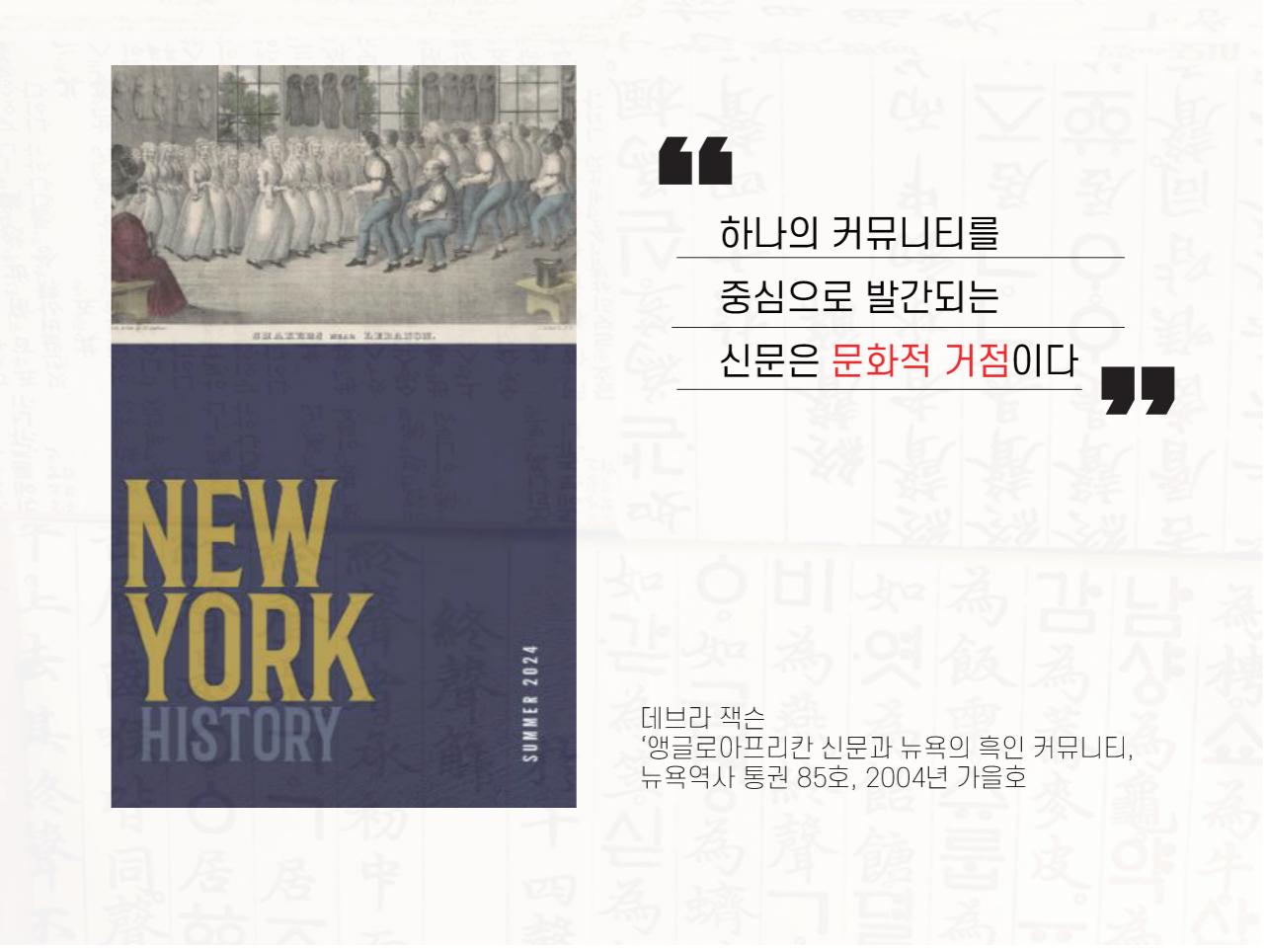
“ 클라크거리에서 발생한
주먹 싸움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보다
우리 독자들에게 더
중요하다.”

누가 지역학을,
제주학을 널리
알려줄까?

지역학은
언론에
어떻게 비칠까



제주학 언론학 발전 방안은
제주연구원, 29일 제주학연구센터와 공동 세미나
제주 말 역사 신화 자연, 정규 수업서 배운다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언론학회 지평 확장 '맞손'
수풀에 파묻히고 덩굴에 휘감기고 방치된 국가등록문화재
수풀에 파묻히고 덩굴에 휘감기고 방치된 국가등록문화재
나비 박사 '석주명 동백나무' 썩둑 "벌레 민원 때문에"
"오름 지명 해석 오류 수두룩 언어 역사적 비교 연구해야"
"잘못된 제주 오름 이름, 철저한 기초 조사로 바로잡아야"
'다랑쉬오름'인가, '달랑쉬오름'인가?
CJB 청주방송 특집 다큐 방영
제주어 명맥 이어가는 KCTV 뉴스 프로그램 '골암시민 들엄시민'
'나비 박사' 석주명과 제주
석주명 '나비 표본' 120여점 90년 만에 일본서 귀환
제주어 지키기 위한 일주일 온다
제주어 어떻게 가르치나...방법 찾는다
제주어 가치 되새기며, 교육의 새로운 길 모색
제주 출신 유학자 변경봉 관련 고문서 124점 도민 품으로
조선 후기 제주 출신 유학자 변경봉 후손 고문서 124점 기증
김순이 명예관장 "제주문화관 제주문화예술 앵커 역할 해야"
박두화 의원, 문섬 개명 지적
"제주어 모바일 사전, 짧은이들 제주어 공부 계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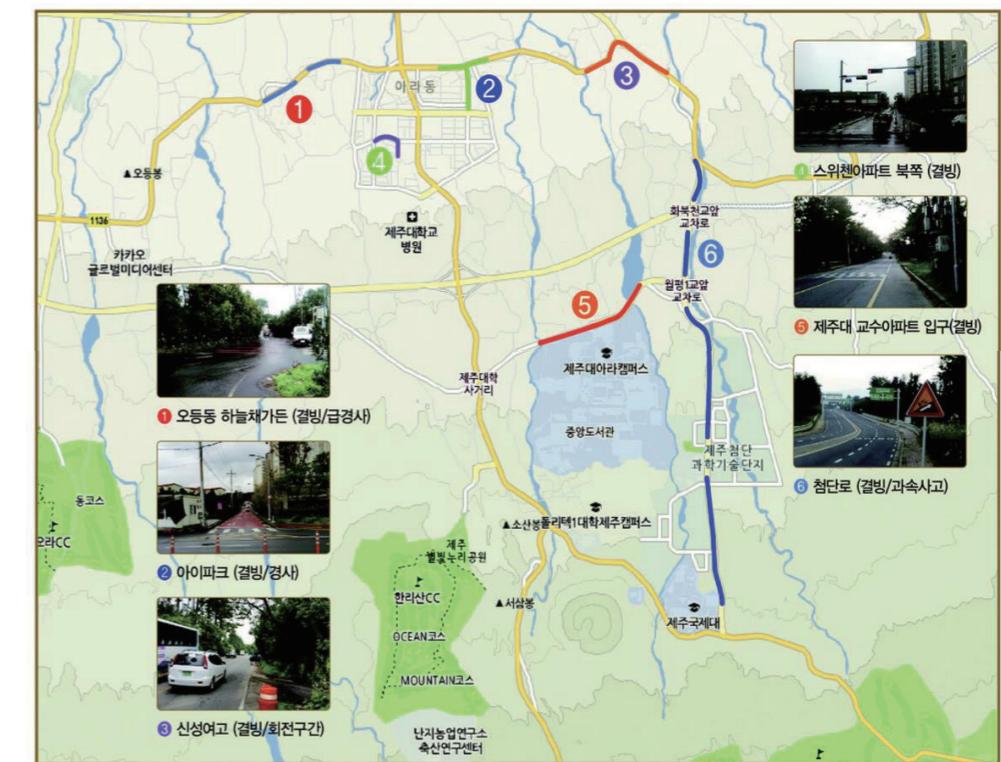


마을신문에는 뭐가 담길까

늘 특종을 담는다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경로당의 인기스타 족욕기
마을 합창단원 모집
마을 길 이야기
손자가 할머니께 쓰는 편지
동네 인기스타 소개
태풍에 쓰러진 폭낭 이야기
위험한 등하굣길
겨울철 마을의 위험 노선
독후감 1위, 교육감배 스포츠대회 2등 수상자
마을에 살고 있는 작가 소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
아주 개인적인 개인의 일상
어린이놀이터의 더러운 식수대
마을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

아라疼은 추워요! 응달·바람 노출 “안돼”



출처 : 아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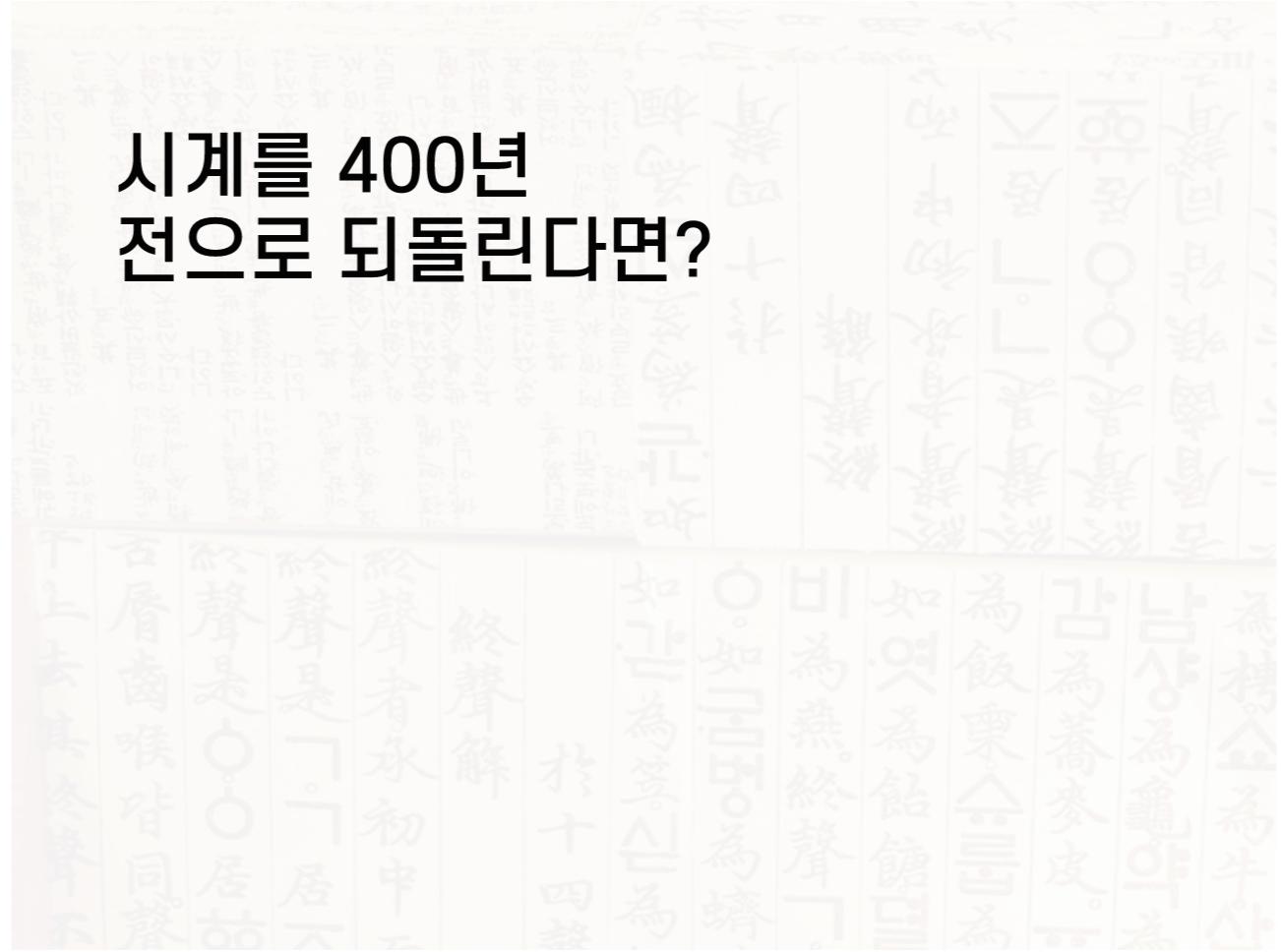


마을신문만의 강점

- 기록을 재창조(창조적 생산자)
- 구술사의 가치를 반영
- 개인의 삶을 역사에 편입, 공공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숨겨진 이야기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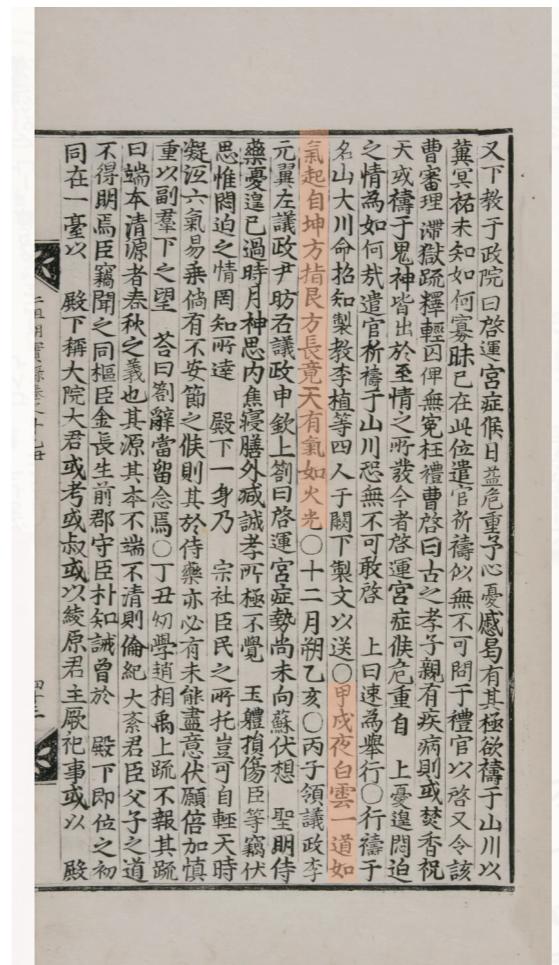
**“기록되지 못한 사실(事實)을
사실(史實)에 편입”**

시계를 400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인조 2년(1624)

“밤에 기운과 같은 흰 구름 한 줄기가 남서쪽에서 일어나 동북쪽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하늘 끝까지 뻗쳤다. 불빛같은 기운이 있었다.”



甲戌夜白雲一道如氣起自坤方指艮方長竟天有氣如火光

사실

事實

史實

事實

史實

공식적인 역사 기억은
지배층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합의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목소리 축소된다.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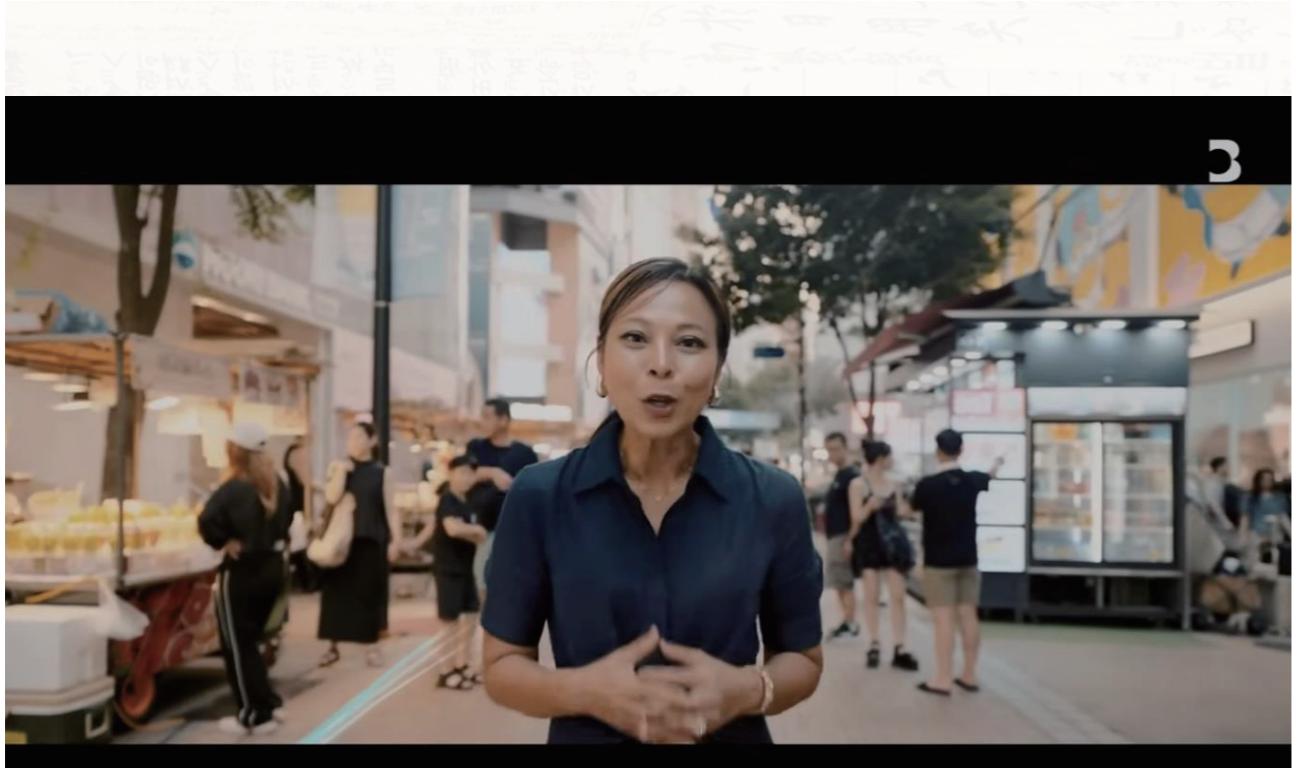
事實

史實

그런 점에서
마을신문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물한 사실이
드러나는 창구가 된다.

공식적인 역사 기억은
지배층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합의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목소리 축소된다.





In South Korea, whoever re-imagines wins.

3

출처 : 블룸버그 오리지널, 2024년 10월 25일

정리

제주학을 알리고, 숨은 역사를 발굴할 수 있는 창구는
마을신문이 될 수 있다

제주학 확장매체로서 마을신문은 중요하지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문제를 감안한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마을신문을
확산하도록 한다

마을신문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상시 진행할 수 있는
센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논하다
업무협약식 및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소멸 위기’ 앞에서 제주학과 언론학은 어떻게 네트워크 할 것인가

- ‘솔루션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이정원

(제주언론학회 총무이사/제주한라대 교수)

1. 서론 : ‘제주 해녀 독도 물질 시연’과 소멸의 네트워크

2024년 9월 초, 제주지역 언론은 일제히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에서 진행된 ‘제주해녀 독도 물질 시연’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1950년대 일제 침략에 맞서 경북 울릉도와 독도 연안 어장에서 지역의 어업권과 영유권을 지키는데 기여한 제주 해녀들의 발자취를 되짚는 물질 시연 행사가 열렸다(윤승빈, 2024, 9, 6). 보도의 근거가 되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기관은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다. 보도자료에서 기관은 “행사를 계기로 독도 수호 정신을 되새기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제주특별자치도, 2024, 9, 6).

제주도청과 언론들의 ‘대대적인 상찬’의 풍경을 보면서 두 개의 질문을 떠올렸다. 첫째, ‘왜 소멸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지 않는가’이다. 해녀들의 물질 시연 기사는 거대한 ‘소멸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근심하는 소멸의 자원들이 기사 안에 집약되어 있다. 일단 제주 해녀가 대표적이고, 해녀들이 몸 담근 바닷속 생태계와 심지어 갈수록 뜨거워지는 바닷물이 ‘소멸 위기’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해녀들이 쓰는 제주어도 같은 네트워크에 속한다. 하지만 제주도청과 언론은 ‘소멸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소멸 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위기를 늦추거나 해소할 대책을 모색해야 할 주체임을 감안하면 그들의 인식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하다.

둘째, ‘왜 제주학은 기사 생산 과정과 네트워크하지 않는가’이다. 물질 시연 보도자료를 상찬의 프레임(frame)이 아닌 소멸의 프레임으로 해석했다면, 기사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독도 수호’의 정신적 가치가 아니라, ‘생물 존속’의 물질적 가치가 기사의 첫머리를 장식했을 것이다. 이어 존속을 이어 가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을 것이다.

기사의 프레임을 전환하고, 대책 수립의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는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다. 제주학의 개념을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적□지리적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온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복합학문”(문순덕 등, 2011)이라고 이해한다면, 물질 시연 기사에서 목도한 해녀와 바다 생물, 제주어 소멸의 위기를 제주 유□무형 문화의 소멸 위기라고 인식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에 제주학의 향후 과제는 소멸의 위기로 향하는 제주 유□무형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소멸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소멸되기 이전의 존재적 형상과 내용, 의미들을 기록해 ‘아카이브’에 보존해야 한다.

독도 물질 시연 기사를 예로 든다면, 제주학은 ‘해녀-바닷속 생물-바닷물-제주어’로 이루어진 소멸의 네

트워크를 입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고, 소멸해 가는 개별 자원의 존재론적 문화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 및 보존,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소멸을 지연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공론장에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제주학이 훌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과제 수행을 위한 정치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결국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동맹 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작업으로 현재 제주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멸 위기’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틀로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을 적용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에서 출발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질문을 끌어내며, 문제를 재정의하고, 질문·검증·반복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보도 방식”으로 규정된다(이정환, 2019).

솔루션 저널리즘의 틀로 언론이 생산하는 ‘소멸 위기’ 담론을 바라보면, 위기에 대한 진단과 비판은 있지만 해법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영유하는 공간과 물질에 대한 소멸 위기 해법은 종종 거론되지만, 생물 등의 비인간에 대한 소멸의 해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 관점을 제주학으로 옮겨서 재구성하면,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제주 유형 자원을 새로운 연구와 사업 분야로 포섭할 수 있다. 물질 기사를 예로 들면, 제주어와 해녀만이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비인간의 영역, 전복, 미역, 문어, 고무옷, 테왁 등도 제주학의 개별 연구 및 사업 주제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학의 연구 범위와 분야, 인력 규모, 학제 간 통섭 교류의 장은 지금보다 더욱 확장된다.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연구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관건은 제주학이 ‘소멸의 네트워크 연구와 위기 해소 대책 모색’을 필수적인 의제로 만드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학과 언론학이 네트워크를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제주학이 ‘소멸 위기’를 프레임으로 언론의 기사 생산 과정과 적극 네트워크 해야 한다.

2. 솔루션 저널리즘의 개념과 작용

1) 솔루션 저널리즘의 개념

2016년부터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 본격 소개된 솔루션 저널리즘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쳐 현재는 ‘해결지향 저널리즘’과 ‘민원해결 저널리즘’, ‘의제추적 저널리즘’으로 불린다(강준만, 2019; 이정환, 2019; 정의철, 2022 재인용). 명칭이 다양한 만큼 정의 또한 관점과 목표, 기대 효과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지다보니 솔루션 저널리즘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진민정·이준형, 2019), 미국의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Solutions Journalism Network)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엄밀한 취재 보도. 문제를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보도 기법”이라고 정의했다(이정환, 2021).

솔루션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언론 산업 미래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가 ‘솔루션 저널리즘’이다. 솔루션 저널리즘 최초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베네치(Benesch)도

언론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네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특정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베네치는 문제를 들추는 것에 머무르면서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보도가 아니라,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가주기를 희망하는 저널리즘을 제안하였다(Benesch, 1998; 진민정 이준형, 2019 재인용).

‘솔루션 저널리즘’ 등장의 바탕에는 감시와 비판으로 일관한 기존 저널리즘의 고찰과 반성이 있다.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중요한 사명이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론 감시와 비판 기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감시와 비판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 이는 정부 등 공공부문과 정치, 사회 문제의 냉소를 심화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실천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게룹(Haagerup, U.)은 “언론이 비판적 기사를 써야 한다는 건 오래된 신화다. 누가 더 빨리 보도하느냐, 누가 더 호되게 비판하느냐의 경쟁을 멈추고 대안과 해법을 이야기할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이정환, 2017). 덴마크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질덴스테드(Gyldensted, C.)는 “기자 대부분이 유리창에 돌을 던진 다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편견을 쏟아내는 언론의 관행이 유리창이 깨진 집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Cathrine Gyldensted, 2013; 이정환, 2017 재인용).

솔루션 저널리즘의 목표는 독자에게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이제 무엇을(what now)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보도 양식이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단순히 좋은 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것과 더 나은 것과 다른 것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완벽한 솔루션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보도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는 첫째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의 대응에 집중하고 그 대응의 효과를 다룬다’. 둘째 ‘가장 좋은 솔루션 저널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를 담고 있는 취재 보도를 말한다’, 셋째 ‘솔루션 저널리즘은 철저하게 근거에 기반한 보도여야 한다’. 넷째 ‘반드시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등이다(이정환, 2021).

피해야 할 솔루션도 있다. 특정 개인을 띄우는 ‘영웅 만들기’는 해법이 아니다. 기술과 혁신을 과장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며, 현장 목소리에 매몰되거나 지나치게 홍보에만 치중해도 안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제안하는 비현실적 솔루션도 경계해야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하려면 탐사보도 이상으로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하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검증된 결과가 있는지,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지, 정치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해법의 아이디어를 다른 문제를 겪는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하우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하며, 한계와 위험 요소를 담아야 한다(이정환, 2017).

2) 솔루션 저널리즘과 지역 언론

솔루션 저널리즘은 지역에 처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에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전제는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이다. 솔루션 저널리즘에서는 이전과

는 다른 민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언론인들도 평범한 시민의 위치에서 문제 해결 역량과 실력을 공동체에 보여줘야 한다.

언론인들은 비판 프레임에서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네트워크하면서 문제의 본질과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성과 균형성, 실용적 적합성을 토대로 해결 방법을 입증□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해법의 한계와 이후 과제 또한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시급한 위기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동등하게 연대할 소양과 감수성,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확인해야 한다.

그간의 논의를 종합할 때, 지역 언론에 부여된 솔루션 저널리즘의 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엘리트주의 관행 개선’, 둘째 ‘언론사-기관-대학 연계를 통한 솔루션 저널리즘 지원’, 셋째 ‘지역성 구현의 명확한 정의’, 넷째 ‘예산과 인력 확보’다.

‘엘리트주의 관행 개선’은 언론인들이 주민들과 동등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요구에서 비롯한다. 공론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민주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지역 언론인들이다. 이에 솔루션 저널리즘 실천을 위해 언론인들은 지역의 권력자나 계몽자 모델이 아닌 ‘봉사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강준만, 2019).

‘언론사-기관-대학 연계를 통한 솔루션 저널리즘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대학이 언론□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미국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강준만(2019)은 사회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은 기존 언론이 맡고, 사회적 갈등과는 무관하되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역대학이 맡는 ‘넛지-솔루션 저널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를 제주학과의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제주 유무형 자원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은 제주학연구센터가 맡고, 이를 활용해 솔루션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역할은 언론학계와 언론사가 할 수 있다.

‘지역성 구현’은 지역 문제를 해결의 관점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핵심 가치 체계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지역은 일상성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공간이자 삶의 공간이며, 지역공동체 의식과 집단의 본질적 특성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지역성은 그 지역과 지역민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질로서, 지역민의 집합적 정체성을 의미한다(Napoli, 2001; 정용복, 2021).

하지만 지역 언론에서 지역성 구현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다. 지역성은 정의하기 힘든 불분명하고, 변화무쌍한 개념으로 이를 상호 배타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Dunbar-Hester, 2013; 김영수·강경수, 2015; 정용복, 2022 재인용). 하지만 유□무형 자원의 소멸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고,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면, 제주학연구센터와 언론학계, 언론은 ‘제주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제주의 지역성으로 정의한 뒤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산과 인력 확보’는 언론인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유지하는 정치□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솔루션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안정된 예산과 인력은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언론인들에게 안정된 취재와 보도, 재교육,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심층 취재 인력 부족 등으로 하루하루 기사의 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해법이나 대안 제시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사실이다.

정교한 사실 확인이나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러한 노력

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기사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원칙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광고 집행 등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기관과 대학-언론이 네트워크 하면서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면 언론에 공적 예산을 지원할 명분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본다.

논의를 종합하여 발제문에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조건인 ‘지역성 구현’의 관점을 중심으로 현재 제주 지역 언론이 생산하는 ‘소멸 위기 담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그런 뒤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학과 언론학이 어떤 ‘지역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해야 하는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려 한다.

3. 지역성 없는 ‘소멸 위기’ 담론

1) 담론에 나타난 ‘내부 식민지’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다음> 포털 뉴스에서 ‘제주 소멸 위기’를 검색했다. ‘정확도 순’으로 나온 기사 중에서 위기와 해결 방향이 동시에 제시된 두 건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먼저, <한라일보>의 “제주 지역소멸·경제위기 해법 이민정책 방점”이다. 첫 문단 내용이 이렇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제주가 처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과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내년도 외국인 정책 방향을 ‘이민정책’으로 잡았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나 유학생 유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민을 통한 제주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백금탁, 2024, 11, 6).

다음으로 <제민일보>인데, “제주 지방소멸 해법 정주여건 조성 필요” 기사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도내 43개 읍면동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인구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인구-일자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취약한 산업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송민재, 2024, 10, 27).

두 기사는 지역 소멸 위기 문제에 내재한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바로 ‘내부 식민지’다. 서울을 대표로 수도권으로 권력과 자본, 인구가 집중되어 이를바 ‘중앙-지역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내부 식민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내부식민지이론(Internal Colonialism)’이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중앙이 지방을 마치 식민지처럼 지배하며 지역의 경제적 개발을 저해하고 자기 결정권을 거부함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를 유지, 확대한다는 이론이다(장호순, 2015).

내부 식민지론을 구체적으로 이론화하는데 기여한 헥터(Hedter)는 중심부 지역은 주변 지역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중심부 지역은 다부문적 산업구조가 발전하는 반면, 주변 지역의 발전 패턴은 중심부의 발전에 종속적인 수단이 된다. 이에 따라 주변 지역의 투자, 임금에 관한 결정은 중심부 지역에서 이뤄지며 결국 주변 지역의 경제력은 핵심 지역에 뒤처지게 된다(Hechter, 1975; 황태연, 1997).

논의를 확대하여 강준만은 한국 사회에서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8개의 내부 식민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았다. 첫째는 ‘경제적 종속’으로 지방과 중앙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은 물론이고 구조적으로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다. 둘째는 ‘불평등 상태의 지속성’으로 지방과 중앙은 지역 간 불평등이 감소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악화되고 있다. 셋째는 ‘정치적 종속’으로 모든 주요 정치적 행위와 결정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은 중앙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따라가고 있다. 넷째는 ‘국가 엘리트의 독점’으로 중앙은 국가 엘리트를 독점함으로써 권력 행사는 물론 국가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소통에서 절대적 발언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섯째는 ‘소통 채널의 독점’으로 모든 전국 매체를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적 의제설정은 물론 각 의제별 논의에 있어서도 중앙 중심적인 의식과 사고를 유포시킨다. 여섯째는 ‘문화적 종속’으로 대부분의 주요 문화적 인프라·자본·행사들이 중앙에 집중된 가운데, 지방의 주민들은 문화적 갈증을 느끼며 중앙을 선망·동경한다. 일곱째는 ‘문화적 모멸’로 중앙의 주민은 지방의 주민을 타자화·열등화하는 의식과 행태를 보이며, 지방의 주민 역시 그런 문화적 모멸을 수용하거나 저항을 포기한다. 여덟째는 ‘지방 엘리트의 탈영 토화’로 계급의 문제를 결합시켜 수도권 상층과 지방의 상층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지방의 상층이 적극적 저항을 하지 않는 ‘암묵적 승인’을 하고 있다(강준만, 2015).

앞에서 소개한 두 개의 기사는 내부 식민지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제적 종속’, ‘정치적 종속’, ‘소통 채널의 독점’, ‘지방 엘리트의 탈영 토화’가 확인된다.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은 전형적인 경제적 종속에 의한 문제이다. 하지만 해결 방향은 지역성을 중심으로 중앙에 저항하며 식민지를 극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 정부와 중앙 언론이 이전부터 제시하고 있는 ‘이민 정책’에 순응하는 형태를 보인다. <제민일보> 기사의 대책 역시 수도권의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중앙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는 식민지 성격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역이 스스로 ‘셀프 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하고 확산하는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사이드 (Edward W. Said, 1979)가 정의한 내부 오리엔탈리즘(internal orientalism)에 의하면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늘 열등한 타자(the other)를 내부에서 필요로 한다고 본다.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할 때, 지방은 서울과 대비되는 열등한 타자로 그려진다(박종성, 2006; 정용복, 2021). 지자체와 지역 언론이 중앙에 종속된 담론을 계속 생산할 경우, 셀프 오리엔탈리즘에 무감각해지며 중앙과 불평등한 관계 구조가 고착화된다(정용복, 2021).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모멸이라 부를 수 있으며, 지역 역시 그런 문화적 모멸을 수용하거나 저항을 포기한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강준만, 2015; 정용복, 2021).

중앙의 정책과 산업 구조, 자본력에 대한 의존을 기반으로 생산한 위기와 해법 담론은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손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 입장에서는 지역을 서열화하고 종속화하려는 욕망을 매우 쉽게 충족하는 성과가 되기에 경계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시선이 아니라, 지역민의 시선으로 위기를 응시하고 해법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선과 저항의 원천이 ‘지역성’이 된다.

2) 비인간 및 문화의 배제

내부 식민지를 반영한 지역 위기 담론은 ‘경제적’ 속성을 갖게 된다. 앞의 두 기사에서 확인하듯이 제주 도정이나 전문가, 언론들은 인구 감소,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분석하며 경제적 원인을 제시한다. 이민 확대 대책, 새로운 산업 유치에 따른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유출 모두 경제적 속성을 지닌다. 하

지만 지역 자체 자원과 역량으로 이 대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서울 등 중앙의 도움과 협조에 기대야 한다. 이는 지역이 내부식민지의 구조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경제만을 이야기하면 공허하다. 경제는 삶의 질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삶의 질은 ‘문화 향유권’이 안정적으로 바탕으로 이뤄야 한다. 경제 문제는 최근 이슈가 아니다. 이미 제주는 오래전부터 경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온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 2000년대부터 이루어진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적인 민간 자본 주도 개발 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하지만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까지 담보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과 사회적 지위□일자리를 비롯하여 교육, 의료, 교통, 안전망 등 사회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 구조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공동의 문제가 많지만, 다른 삶을 사는 시민들이 만나며 연대하는 기회와 장소가 줄어들고 있어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제주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가치가 ‘문화향유권’이다. 소위 우아하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화 향유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시설, 프로그램 체험만으로 문화 향유가 충족되지 않는다. 문화 체험으로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질문, 성찰 등을 삶의 사유로 확장할 때 진정한 문화 향유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해녀들의 물질 사진을 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흘리는 노동의 땀과 눈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는 제주의 지역성과 더불어 평화, 인권, 노동 등의 사유로 확장할 수 있다.

문제는 지역에서 제주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지역 문화’의 의미를 좁게 규정하고 해석해버리는 데서 비롯된다. 지역에서 통용되는 문화의 개념은 크게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흔히 문화 예술 시설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국한해 문화라고 인식한다.

문화의 근본 개념은 모든 삶과 연결되고 토대에서부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양식’이다. 프랑스 문화부장관 잭 랑(Jack Lang)은 1981년 11월 17일 국회 연설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과 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화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고민과 무관하게 멀리 떨어진 성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문화는 바로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문화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한 부서, 하나의 계층, 하나의 도시, 한 분야의 소유물도 아니다. (...) 우리의 문화정책을 두 마디로 요약해서 나타낸다면, 창작과 지방 분산화이다.”(진인혜, 2007).

「문화기본법」 제3조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요약하면, 문화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를 개인 일상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의 제한된 문화 개념으로는 문화와 일상이 분리되어 이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와 일상이 분리되면 문화향유권 또한 주민들과 분리된다. 분리되는 순간, 문화향유권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획득하고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의 지위를 벗어난다. 행정과 전문가들이 주민들에게 내려 보내는 혜택이 된다. 이러한 인식이 고착하면 문화향유권은 자본과 행정에 종속된다.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가 자본과 행정의 배려 속에 이루어진 시혜적 결실로 끝난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통해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합의하고 통찰해야 하는 과제는 ‘지역 문화’를 근본 개념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즉, 문화와 지역민의 일상을 적극 연결해 삶의 질을 확대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와 일상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동맹을 맺어야 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로 상징되는 ‘비인간들’이다. 기후 위기 등의 지구적 문제로 소멸 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바로 그 ‘비인간들’이다. 올해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제주에서 지역민들 삶의 양식으로 함께했던 비인간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 비인간들이 겪는 피해의 규모와 향후 파급력을 예측할 수 없기에 소멸 위기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인간들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소멸 위기 담론에는 지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와 비인간의 존재가 배제되어 있다. 일례로 언론은 폭염으로 감귤과 광어가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을 경제적 문제로 해석, 보도하고 있다. “올해 여름 덮친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뛰었다. 배추, 토마토, 감귤에 이어 광어 등 횟감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올 겨울 ‘감귤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는 식이다(양지윤□이광식, 2024, 10, 18).

지역민의 삶과 연결하여 문화 소멸 의미로, 비인간과 공존 소멸의 의미로 지금의 사태를 걱정하는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언론 스스로 이런 전환된 시선을 기사 생산 과정에 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네트워크 체제가 필요하다. 제주학과 언론학, 나아가 지역 언론과 연대망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

4. 제주학-언론학 네트워크의 방향성

1) ‘제주 문화 지속성’이라는 지역성 합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유명한 말, “언어는 존재의 집”을 소멸 위기를 겪는 제주어와 연결하면, 제주 사람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를 보존□계승해야 한다는 소명 및 정치의 구호로 확장된다. 하지만 이는 비인간을 배제한 채, 인간만 중심에 놓고 제주어를 바라보는 다소 단편적인 규정에 가깝다.

하이데거의 말에서부터 일어나는 사유의장을 비인간까지 확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테면, 무의 제주어인 ‘놈삐’를 이야기할 때, 놈삐로 김치를 해먹는 인간만을 떠올려선 안된다. 사유를 확장하여 폭염으로 가격이 폭등해 먼 미래에 식탁에서 사라질지 모를 무의 존재를 걱정해야 한다. 실제로 9월까지 이어진 폭염·폭우 등 기상 악화로 씨를 뿌린 자리에서 싹이 나지 않아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다(최하얀, 2024, 10, 30).

무가 사라지면 ‘놈삐’라는 존재의 집도 사라진다. 이는 다른 비인간도 마찬가지다. 이에 소멸 위기로 상징

되는 제주어의 존재적 위치와 의미, 규정도 관점은 바꿔야 한다. ‘유네스코 소멸 위기’만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 등으로 소멸 위기로 향하는 비인간과 동일 선상에 놓아야 한다. 제주의 비인간이 소멸하면 이를 정의하는 존재의 집, 제주어도 소멸해버릴 것이라는, 문화와 연계된 관점으로 위기를 다루어야 한다.

제주학과 언론학이 공유하고 합의해야 할 지역성은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제주 문화’의 지속성이어야 한다. ‘제주 문화 지속성’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제주학과 언론학은 네트워크를 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공동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성은 지역과 지역민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성질로서, 지역민의 집합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인간과 비인간을 포용하는 제주 문화는 제주 사람들의 집합적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제주학과 언론학이 실천적 방안을 통해 구현할 만한 지역성이 된다. 동시에 제주학과 언론학은 지역성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집합적 정체성을 넘어 지역 및 지역민 삶의 유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 문제’의 지위로 올려놔야 한다. 그래야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지역성 논의 및 합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문화’를 원래 개념으로 회복하는 것에 있다. 제주학과 언론학이 긴밀하게 네트워크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역 문화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문화 시설 확충이나 문화 예술 단체들의 행사만 문화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 일상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행정과 관광, 1차 산업 등의 정책도 인간 및 비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존재의 유지에 영향을 준다. 이를 정책들도 지역 문화의 개념에 포함해야 하고,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망에 들어와야 한다. 이를 통해 공론장에서 정치와 행정, 관광, 1차 산업 등도 지역 문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들이 지역학과 동맹을 맺고 상호작용할 때 소멸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해결 방안도 실질적으로 모색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독도에서 제주 해녀들이 물질 한 기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주권의 시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해녀와 제주 사람들이 비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누려왔던 문화가 서서히 유실되고 있음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장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조성된다면 지역 문화를 축으로 하는 ‘지역 문화 자치’도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다. 문화 자치는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에서 비롯한 개념이다. 개인 한 명 한 명의 기본적 문화 권리가 주체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개개인 중심의 상향식 문화정책을 표방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이 더 이상 행정 중심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하, 2022).

행정 및 문화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개개인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으로 문화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국가 혹은 중앙정부, 나아가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없으며, 특정 계급에 소유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획일적이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주민이 지역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며 이는 곧 문화자치의 실천이기도 하다(앞의 책).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한다는 것은 지역의 공동 문제를 지역민과 언론사-관□학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널리즘 실천 과정 자체가 자치의 궁극적 가치를 지향한다. 즉, 문화 자치를 통해 지역 문화 회복 및 유지를 실현하는 것은 행정이 내려보낸 획일적인 해결 대책에 묶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저항적 선언이 된다. 지역민이 스스로 네트워크하면서 상향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체적 선언이기도 하다.

2) ‘해법 모색’ 및 ‘소멸 자원 기록’ 동시 추진

삶에서 친숙하고 익숙하게 관계를 맺었던 비인간의 존재들이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그 규모와 형태, 내용들이 낯설게 변해버리는 경우를 올해 자주 목격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의 흔한 먹거리로 인식되었던 대표 작물과 바닷속 생물들이 큰 피해를 입거나, 환경이 달라져 제주를 떠나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일례로 〈제주MBC〉는 “올해 레드향 재배 농가를 조사한 결과 열과 피해율이 평균 83.2%에 달한다… 농가들은 감귤과 달리 레드향 열과 피해는 재해보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이따끔, 2024, 10, 14). 〈연합뉴스〉는 밥상에 찾아온 변화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짚고 대책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기획 ‘내일은 못 먹을지도’를 연재했다. 그 중 한 기사는 이렇게 전했다.

“지난 7월 24일 제주 앞바다에 발표된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이어지다 10월 2일에야 해제됐다. 고수온 특보 체계가 만들어진 후 가장 늦은 9월 22일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기록을 불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고수온으로 인해 유독 올해 제주 연안에서 한치와 갈치 등 주요 어종이 잡히지 않았다. 성게에 알이 차지 않고, 양식 광어는 대규모 폐사했다.”(백나용, 2024, 10, 20).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서 큰 피해를 입은 비인간들이 서서히 소멸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등을 언론은 지속적으로 켰다. 제주학과 언론학은 경고를 지연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부터 긴밀히 네트워크를 맺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성인 ‘제주 문화 지속성’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한들 소멸 위기를 잠시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완벽히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공감한다. 그렇다면 대책 마련과 병행해야 할 작업이 소멸해 가는 비인간, 제주 유무형 자원들을 지금부터 기록하는 일이다.

다시 제주 해녀 물질 기사를 빌려오면, 제주 해녀들과 네트워크를 맺은 비인간들은 제주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들이 된다. 그렇다면 먼저, 제주학 차원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비인간들을 연구하며, 그로부터 얻은 다양한 성과와 자료들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런 뒤에 언론학 및 지역 언론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비인간 연구 결과와 기록들을 기사를 통해 또 다시 기록하며 공론장에서 공유해야 한다. 연구 결과와 기록들이 공론장에 소개될 때, 이는 학술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미디어는 ‘소멸 위기’의 프레임으로 보도할 것이고, 대책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녀 물질 기사는 상찬과 환영의 의미로만 소비되지 않는다. 소멸의 우려와 걱정을 바탕으로 해결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실천의 매개로 작동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듭 강조

하지만,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언론과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 언론과 네트워크를 넓힌다는 것은 단순히 보도자료와 취재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다. 언론의 기사 생산 과정에 제주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언론이 지역 문화와 제주학에 대한 시야와 통찰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사 생산 과정에서 유무형 자원에 대한 전문적 자료와 지식,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적 관점으로 소멸 위기를 분석□해석하며,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공동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제주학-언론학 솔루션 네트워크’가 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제주학-언론학 네트워크 정책 제언

1) ‘제주학-언론학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 저널리즘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안되는 것이 ‘저널리즘 씽킹(journalism thinking) 방법론’이다. 첫째,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둘째,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셋째, 질문을 시작하고, 넷째, 반론을 듣고 검증하고, 다섯째, 핵심을 뽑고 해법을 끌어내는 과정이다. 셋째와 넷째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핵심에 다가가는 과정이 언론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이정환, 2019). 반론과 검증, 해법을 충실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책을 책임지고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민□관□학과 긴밀히 교류해야 한다. 결국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식 기구 성격의 ‘제주학-언론학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가 운영되어야 한다.

소멸 위기의 원인과 질문, 구조적 개선 대책을 모색한 뒤에 해법의 한계와 후속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네트워크는 필요하다. 솔루션 저널리즘에서는 언론인들이 문제를 감시□비판만 해 현장을 떠나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탁상공론이나 전문가들의 따옴표 저널리즘이 아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추적하면서 문제의 구조를 드러내고 사회적 해법에 다가가는 작업이다(이정환, 2019).

솔루션 저널리즘을 위해서는 비판의 프레임에서 해결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에 접근하는 ‘질문’을 바꾸어야 가능하다. 새로운 질문을 위한 전문적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사안의 본질에 입각한 질문을 만들 때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안과 현장의 연결,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질문과 자료 제공, 보도 방향성 제시, 한계 및 이후 과제 극복 방안, 예비 언론인 양성 등에 있어서도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제주학-언론학 네트워크’에서는 언론사 간 네트워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제주는 인구 및 광고시장 대비 많은 매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정작 공론장에서 위기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개별 언론사들이 기준에 미흡한 해법을 중구난방식으로 보도하면 공론장은 더욱 혼탁해진다. ‘소멸 위기’가 언론사를 초월한 지역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규합하는 공론장을 조성해야 한다. 언론사 공동 기획□취재□보도를 통해 본연 의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트워크 운영에서 예상되는 우려는 ‘비판 저널리즘’의 위축이다. 공공 기관은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다. 공공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면 이해관계에 얹혀 감시□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 이를 지역민들은 유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가 복잡하고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소멸 위기’ 문제에 한정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2) ‘비인간 기록’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공동체를 둘어주는 핵심 요소는 ‘기억’이다. 제주 유□무형 자원은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과 소속감 등 지역성을 반영하는 ‘기억의 원천’이 된다. 서구 기록학이 주목한 공동체의 가치는 종종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이른바 ‘기억 공동체(community of memory)’. 기억 공동체는 특정한 집단 기억 혹은 공동의 사회적 기억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억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억을 담보하는 기록을 생산해내거나 보관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는다. 때문에 이들은 공동의 기록을 소유한 ‘기록 공동체(community of records)’로 불리기도 한다(윤은하, 2012).

기록 공동체에 관해 Bastian, J.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록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의식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록은 곧 공동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기록 소유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 이외에도 기억의 주체, 기록의 대상, 기록관리 주체 등 기록의 생산과 소비, 보존과 열람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공동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astian, 2003; 윤은하, 2012).

이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은 ‘기억 공동체’를 ‘기록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 현장을 취재, 보도하며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비인간 역시 마찬 가지이다. 비인간과 오랫동안 동맹을 맺고 살아온 제주 사람들이 ‘기억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할 때, 그 기억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며 제주 공동체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토양은 비인간에 대한 기록이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问题是 ‘기록’이다. 언론사가 남긴 다양한 기록을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 관리, 보존할 것인가? 기록의 공동 소유, 관리, 보존은 언론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 위기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취재와 보도 시간이 줄어든다. 이전의 기록에서 남겨진 한계와 후속 과제를 극복하는 방향의 해법을 만들 수 있어서 해법의 실용성과 신뢰성도 충족한다.

기록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록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역사에서 소외되고 침묵이 강요되어온 사회 내의 여러 집단들은 종종 자신들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물리적으로 규제당해왔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한 희생은 정치□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기록 관리에서도 적용된다(윤은하, 2012). 모든 기록이 아니어도, 적어도 소멸 위기와 같은 ‘공동 문제’의 기록만큼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소외됨 없이 확인하고 활용,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공동체 내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소통과 참여, 협력이 수월하게 된다.

이에 점차 소멸해 가는 제주 유무형 자원, 비인간들을 기록하고, 공동 관리□보존□활용하는 ‘공동체 아

카이브(archives)’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는 역사 가치가 있거나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과 문서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정의된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위에서 아래로’의 중앙집권적 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기록관리 담론을 반영한다.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는 공동체가 스스로 남긴 기록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현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기억을 보존해 넘겨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윤은하, 2012). 제주학-언론학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의 제도적 근거와 재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자료 관리□보존□제공을 넘어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를 본연 의미에 맞게 운영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기록의 민주주의를 통해 소통과 참여□협력의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민주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지역민 중심의 실용적인 해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민들의 참여가 없는 권력 중심의 기록은 자칫 제주학을 ‘대상화’하고 지역민을 ‘타자화’한다. 기록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제주학’은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변모한다. 제주 지역에 내재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풍부해지고, 아카이브는 그야말로 ‘제주학의’ 아카이브가 된다. 바다에 내재한 삶□사회 구조와 지식, 맥락을 보존하고 지역민들의 시각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네트워크 과정에 지역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설문원, 2012).

3) 언론인 취재 지원 및 교육기구 구성

‘솔루션 저널리즘’을 언론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언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론인이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풀(pool)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¹⁾을 제시하고 있다(진민정□이준형, 2019). 이를 요약한다면 솔루션 저널리즘에 있어서 기자들의 전문성은 해법을 직접 만드는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해법을 잘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들과 본질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언론인들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을 원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국내 언론인 1,6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약간 필요하다' 27.3%, '매우 필요하다' 68.7%)였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 취재

1) 진민정과 이준형의 연구보고서에서 박영흠 교수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보편화된다면 해법을 함께 고민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풀(pool)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인들은 역량 있는 전문가를 식별하고 발굴하며 이들과 소통하여 해당 내용을 잘 전달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언론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여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야 전문가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전문가의 언어를 대중에게 잘 풀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김서중 교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려면 해법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법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매스컴이 만든 것이 아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정도까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진민정□이준형, 2019). 여기서 제시된 ‘전문가 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시스템 변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만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감 시간 압박에 시달리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좁고 깊은’ 전문 지식 습득을 원하고 있지만, 출입처 위주 취재 관행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언론인들은 자구책으로 독학, 강연 및 컨퍼런스 참가, 전문가 포럼 활동 등 전문성을 높이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다(오세욱, 2018).

‘솔루션 저널리즘’ 사례에 따르면 해외 언론인들이 반복해서 하는 조언의 하나가 “내러티브를 복잡하게 하라(Complicates the Narrative)”는 것이다. 한국 기자들의 일상 용어를 빌리면 기사 주제, 기자 관점으로 일컬어지는 소위 ‘야마’를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문제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해법이라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마’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취사선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맥락이 사라지고 실체적 진실에서 멀어지게 된다. 요약하면, 야마를 중심으로 문제를 단순하게 정의하고 깔끔하게 스토리텔링한 기사는 솔루션 저널리즘에 맞지 않은 기사²⁾인 것이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담을수록 좀 더 완전하고 정확한 기사가 되고, 시민들도 복잡한 내러티브를 맞닥뜨릴 때 호기심을 갖고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미디어오늘, 2022, 11, 5).

인터뷰 대상이 하는 말을 다르게 듣고, 인터뷰 대상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 대상의 말 속에서 모순과 본질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복잡한 내러티브를 끌어내는 것. 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니해도 ‘언론인의 전문성’이다. 문제는 전문성이 머무르거나 정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더욱 복잡해지는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무르익어야 한다. 솔루션 저널리즘 구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언론인 재교육 토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제주 같은 지역 언론 환경에서는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특히 제주 학 같은, 학문 간 융복합을 기초로 하여 제주 문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학문의 교육 기회는 더욱 얻기 힘들다. 하루하루 주어진 취재와 보도영업 등 각종 업무량을 소화하기도 버겁다. 언론사 자체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무형 자원 소멸 위기와 같은 공동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전제로, 언론사와 제주 학연구센터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언론인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제주학-언론학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를 통해 ‘비영리 언론인 교육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오세욱은 비영리 저널리즘 교육기관에 대해 “그 자체가 대학처럼 학위를 부여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점 인정은 언론인들이 향후 정규 대학에서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받는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언론인 복지 차원에서 언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오세욱, 2018).

‘솔루션 저널리즘’은 언론인들이 의미없는 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기 직업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한다(진민정□이준형, 2019). 이 기대 효과가 텅빈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기획-취재-보도-교육 순환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성장의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인들의 높은 전문성과 자존감, 자부심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시민과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실질적인 ‘솔루션 저널리즘’이 구현된다.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하나씩 만들기 위하여 솔루션 저널리즘에 입각한 제주학과 언론학의 네트워크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제주학-언론학-언론사 솔루션 네트워크’로 확장해야 한다. 공동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민주적으로, 실용적으로, 본질에 맞게 운영할 때, ‘제주 문화 지속성’이 실현되는 희망이 자랄 것이다.

2)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복잡하게 쓰기’의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듣는 방법이 필요하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이(interviewee)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 모순을 파고 들면서 본질을 파악한다. “이 이슈에서 제대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 “좀 더 말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이의 말을 요약해서 확인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동의가 아니라 이해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라고 물으면서 거듭 확인을 하는 게 좋다. 셋째, 복잡한 내러티브를 끌어들여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숨은 맥락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넷째, 서로의 확증 편향을 깨야 한다. 인터뷰 상대방에게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어 역시 스스로의 편견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이야기에 스스로를 노출할 필요가 있다(미디어오늘, 2022, 11, 5).

참고문헌

강준만 (2015). 지방의 내부식민지화를 고착시키는 일상적 기제: 대학-매체-예산의 트라이앵글. 〈사회과학연구〉, 54권 2호.

강준만 (2019).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가능한가?: 지역에서의 ‘낫지-솔루션 저널리즘’을 위한 제언. 〈사회과학연구〉 58집 1호.

김성하 (2022). 〈문화자치-그 의미와 조건〉, 경기연구원, 2022.

문순덕 등 (2011). 〈최종보고서-제주학연구센터 운영 기본계획(2012□2016)〉.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오늘 (2022, 11, 5) 해결 지향의 접근, ‘야마’를 버리고 복잡한 내러티브를 끌어내라.

URL: <http://www.media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39>

박종성 (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서울: 살림.

백금탁 (2024, 11, 5). 제주 지역소멸·경제위기 해법 이민정책 ‘방점’. 〈한라일보〉.

URL: <https://www.halla.com/article.php?aid=1730798591764687073>

백나옹 (2024, 10, 20). [내일은 못 먹을지도] ⑥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 미기록 어종 ‘줄줄’.

URL: <https://v.daum.net/v/20241020070527202>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권.

송민재 (2024, 10, 27). 제주 지방소멸 해법 “정주여건 조성 필요”. 〈제민일보〉.

URL: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933>

양지윤□이광식 (2024, 10, 18). 폭염 후유증…감귤·광어 ‘이상 급등’. 〈한국경제〉.

URL: <https://v.daum.net/v/20241018181701734>

오세욱 (2018) 재교육이 간절한 언론인들과 이를 위한 제안-평생교육 가능한 비영리 저널리즘 교육기관 필요해. 〈신문과 방송〉, 566호.

윤승빈 (2024, 9, 6). 독도 지킨 제주해녀 가치 재조명…‘독도 물질’ 재현. 〈제민일보〉.

URL: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923>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권.

이따끔 (2024, 10, 14). 레드향 열과 피해 83%..재해 인정해야. 〈제주MBC〉.

URL: <https://jejumbc.com/article/fnbbmEQEuX4>

이정환 (2017). 실천제안-솔루션 저널리즘: 팩트와 진실에서 한 걸음 더, 최선의 해결책까지. 〈신문과방송〉.

이정환 (2019). 솔루션 저널리즘, 질문으로 시작하자. 〈인물과사상〉, 256호.

이정환 (2021) 〈문제 해결 저널리즘〉. 서울: 인물과사상사, 2021.

장호순 (2015). “종속”과 “배제”: 한국 지역 방송의 내부 식민지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5권 2호.

정용복 (2021). 지역방송의 시트콤 편성과 지역성 재현 연구: KCTV제주방송 〈하이퐁 세기족〉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권 4호.

정의철 (2022). 지역방송 저널리즘 강화와 해결지향 저널리즘의 역할 지역방송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 탐색. 〈언론과학연구〉, 22권 4호.

제주특별자치도 (2024, 9, 6). 보도자료-독도 지킨 제주해녀 정신 되새긴다.

URL: <https://www.jeju.go.kr/news/bodo/list.htm?dr.start=&dr.end=&qType=title&q=%B%8F%85%EB%8F%84&act=view&seq=1476332>

진민정□이준형 (2019). 〈솔루션 저널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진인혜 (2007).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59권.

최하얀 (2024, 10, 30). 폭염폭우에 싹 나지 않아…가을무 재배면적 20% 급감. 〈한겨레〉.

URL: <https://v.daum.net/v/20241030131005668>

황태연 (1997). 내부 식민지와 저항적 지역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7권.

Bastian, Jeannette, (2003). Ow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Benesch, S., (1998), The rise of solutions journalism. Columbia Journalism Review, 36(6).

Cathrine Gyldenstedt (2013, 9, 3). The media is changing for good. 〈Positive.News〉.

URL: <http://www.positive.news/2013/society/media/13709/media-changing-good-2>

Hechter, M. (1975). Internal Colonialism. London.

Napoli, P. M. (2001). Foundations of communications policy. Cresskill, NJ: Hampton Press.

Said, E.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MEMO

MEMO

MEMO

MEMO

MEMO